

中國의 政局展望：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1995. 3.

최 춘 흠 (자료조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

目 次

I. 問題提起	1
II. 第8期 全人大 結果 分析	1
1. 國內문제	2
2. 對外關係	9
III. 向後 中國의 政局 展望	10
1. 江澤民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지속	10
2. 안정위주의 경제정책 추진	10
3. 軍부의 위상 강화	12
IV.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15
1. 北한의 安정문제	16
2. 韓半島 平和체제 구축문제	18
3. 北한 핵문제	20
V. 韓國의 考慮事項	21
1. 對중국 차원	21
2. 南북한 關係	22

I. 問題提起

- 중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第8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 3次會議(1995.3.5~18)가 北京에서 개최되었음.
- 최근 중국은 鄧小平의 건강악화설과 경기과열로 의한 인플레이 등으로 권력승계와 개혁·개방을 圍繞한 지도층내 권력투쟁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全人大가 개최되었는 바, 금번 全人大의 결과분석은 향후 중국의 政局을 전망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중국의 권력승계를 대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향방 및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第8期 全人大 結果 分析

- 鄧小平이 불참한 가운데 개막된 금번 全人大는 李鵬 총리의 「政府工作報告」를 청취하고, 이봉 총리가 제안한 국무원 부총리 급 인사의 임명안, 국방비 증액, 중앙은행법 등 주요 안건을 통

과시킴.

- 이붕 총리는 정부의 1995년도 경제, 사회, 국방, 대외관계, 통일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¹⁾ 주로 경제문제에 치중, 중국이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도와 향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음.

1. 국내문제

가. 정치문제

(1) 권력구조 개편

- 경제위주의 체제개편으로 江澤民(總書記)의 기반이 강화되고 정치개혁(민주개혁)에 대한 조치는 없었음.
- 3월 10일 주석단 2차회의는 1994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원겸 서기처 서기로 임명된 吳邦國(53)과 姜春雲(64)의 국무원

1) 李鵬, “1995年3月5日在第8期全國人民代表大會第3次會議上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5. 3. 6.

부총리 승진안을 통과시킴.

- 부총리급 인사는 1993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吳邦國 부총리를 산업 및 국영기업부문, 山東省 출신 姜春雲을 농업 부문을 관장케 함으로써 기존의 朱鎔基 상무부총리(경제전반 관장), 鄒家華(경제계획 분야), 이난청(대외무역담당), 錢其琛(외교담당) 등을 포함, 모두 6명의 부총리로 늘어남.

- 이봉 총리 관공실주임 출신인 李世忠의 국무원 승진안을 통과시킴.

(2) 강택민 정치기반 강화

- 강택민 총서기는 행정분야, 특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대상인 국영기업과 농업분야에 자신의 심복을 앉혀 朱鎔基 부총리가 관장하고 있는 경제체제개혁 분야에까지 권력기반을 확대함.²⁾

2) 江澤민이 은퇴정년을 1년 앞둔 姜春雲을 선택한 배경에는 姜春雲이 전인대 前상무위원장인 萬里, 前국무원 부총리인 谷木와 田記雲, 당 인사문제에 관여하였던 前정치국 위원인 宋平, 羅干, 遲浩田국방장관, 張萬年총참모장 등 산둥성 출신의 후원이 있었음을 감안하였다는 보도가 있음. Steven Mufson, "Signs of Dissent in a Chinese Vot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5. 3. 18-19; 「세계일보」, 1995. 3. 18.

◦ 금번 全人大에서 상당 수의 대표들이 당 지도부가 제출한 주요 인사문제와 주요 법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강택민 체제에 대한 도전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수부담률을 거의 두 배이상 증가한 데 대한 불만표시로 분석됨.

- 이전에 90%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행정부 고위관리의 임명안이 이번 부총리 인사에서는 63%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나타냈음. 전체투표자 2,752표 중 上海 출신인 오방국은 86%인 2,366표를, 山東 출신인 강춘운은 63%인 1,746표를 (찬성: 1,746명, 기권: 391, 무투표: 10, 반대: 605) 획득함.

◦ 그동안 全人大가 당중앙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추인하는 것에서 탈피, 각 省을 대표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목소리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全人大가 1년에 한차례 밖에 열리지 못하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택민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투표결과가 全人大 상무위원장인 喬石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여 喬石의 정치적 발언권이 당내 민주화라는 기치아래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줌.³⁾

3) Steven Mufson, *ibid*

나. 경제문제

- 이붕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지난해 경제발전 방향과 국내 총생산, 농공업, 중점 건설사업, 대외무역, 재정상태 등에 관한 실적을 발표하고 경제성장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함.
 - 1994년도 국내총생산은 43,800억元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 극심한 수해와 한발로 인해 농업생산증가율이 3.5%에 그친 반면, 공업생산증가율은 18%로 공업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농촌·도시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 1994년도 대외무역 수출총액은 전년대비 20.9%증가(2,367억 달러)하였고, 외환보유액 역시 40%증가한 약 51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외국의 대중 실제투자액도 약 33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재정적자와 금융질서는 계획대로 개선되었음을 언급하였음.

- 이붕 총리는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 억제, 농업생산율의 저하, 분배정책의 비효율성, 지속적인 國有企業의 비효율성, 중앙과 지역간 갈등, 경제기구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안정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표방함.

- 중국은 심각한 부패문제, 일부 공무원들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作風과 瀆職사건 등이 인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중시, 대처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력히 밝힘.
-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농산품 공급력 확대, 고정자산 투자 억제, 생필품가격 관리·감독 기능 강화, 국유기업의 활성화 등을 제시함.
 - 1994년도에 11.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0% 소매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질 물가상승률이 21.7%에 달한 점을 시인 - 금년도 경제성장을 8-9%로 하향조정하여 물가상승률을 15%이내로 억제하고자 함.
 - 水害, 旱魃,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 등으로 농산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촌투자는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시인함.
 - 市場과 物價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술하고 이에 대한 法制가 완전치 못하여 유통질서의 혼란 및 매점매석 현상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시인, 향후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의 조절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힘.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경제성장보다는 통화가치 안정에 두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앙은행법(인민은행법)을 통과시킴.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임.⁴⁾

- 또한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공업분야의 국유기업은 아직도 시장경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재 강조함.

다. 국방문제

- 1995년도 「정보공작보고」는 중국의 「적극방어」 안보전략이 지속될 것임을 표방하였으며, 국가주권 확보를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하였음.
- 군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주장하고 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방함.
 - 이봉 총리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에 대한 방위를 강화, 국가의 주권과 해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최근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에 강경입장을 취할 의사임을 표명함.⁵⁾
 - 1995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20.68% 증가된 629억원(약75억 달러)로 책정되었는 바, 이는 중국이 1994년도 국방예산

4) Lincoln Kaye, "China: Vital Sig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 3. 30, pp. 14~15.

5) 李鵬, 「1995年3月5日在第8期全國人民代表大會第3次會議上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5. 3. 6.

을 520억元으로 1993년도에 비해 22.4%나 증액한 사실과 함께 1979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20%이상 국방예산을 증액시킨 것임.

- 주목할 점은 1995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15%의 절반 수준인 9.3%로 낮춘 상황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 것임. 이는 중국지도부가 국방비 증액이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증액한 것으로 보임.⁶⁾

라. 통일문제

- 이붕 총리는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반환은 평화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상실하였던 중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임을 밝힘.
- 중·대만 경제관계가 가일층 밀접해지고, 상호방문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아래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 것이나,
 -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방식에는

6) Nayan Chanda, "Fear of the Drag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 4. 13, pp. 24~25.

반대할 것이며, 특히 대만독립의 기도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2. 대외관계

- 李鵬 총리는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긴장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적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경향이 확실히 증가되고 있음을 언급함.
 - 다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음.
 - 그러나 패권주의와 强權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局地的 무장 충돌이 계속되어 많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내포함으로써 세계정세는 아직 평온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함.

- 중국은 지난해와 같이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를 견지, 세계 각국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을 표방함.
 - 중국은 평등호혜원칙하에 대외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타국에게 자국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강요하는 강권정치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표방함.

- 이봉 총리는 지난해 「정부공작보고」때와는 달리 남북한을 거론하지 않고 다만, “중국은 과거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은 주변국에 위협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Ⅲ. 向後 中國의 政局 展望

- 鄧死後, 중국 국내정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되고 군의 역할과 전문관료의 입장이 강화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안정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1. 江澤民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지속

- 중국은 1997년 9월 제15차 당대회에서 新지도체제 선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1~2년내에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현재 보수원로들의 노쇠화로 이들의 정치일선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 毛澤東 死後인 1976년 말 모택동이 지명한 화국봉이 국가주석, 당총서기, 군사위 주석직을 겸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실각한 것과 같은 사건이 강택민 총서기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이는 강택민 총서기가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등소평 후계자로 확정, 黨·政·軍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 권력유지에 필요한 자신의 입지를 여러 분야에서 강화하여 왔으므로, 군의 적극적인 정치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강택민은 黃菊 上海市長을 정치국원으로, 曾慶紅 상해시 당부서기를 당중앙 판공처 주임으로, 공심한 上海市 당선전부 부부장을 당중앙 선전부 부부장으로 승진 발령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인 上海派를 당중앙 선전부에 포진시켰음.⁷⁾
 - 강택민은 1989년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임명된 후 3大總部

7) “中組部部長難産内幕”, 「爭鳴」, 1994年 12月號. pp. 18~19.

(總참모부, 總정치부, 總후근부) 및 7대 軍區 주요 지휘관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교체하고 총 29명의 上將中 25명을 직접 임명하였음. 그중 10명은 산동성 출신으로 강택민은 군부내의 실세인 山東派와 연대하여 자신의 기반을 다져 왔음.

- 총참모부 주임(군의 작전 및 전군의 최고 지휘담당)에 산동파인 張萬年 上將, 부주임에 산동파인 王瑞林 上將, 국방장관에 遲浩田 上將, 북경군구사령관에 李乃柱 上將을 임명하는 한편,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무장경찰부대 사령관에 측근인 巴忠潭을 임명(1993. 1), 군부내 세력기반을 강화하여 왔음.

- 그러나, 만일 경제정책의 실패와 사회불안 악화 등으로 개혁·개방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지도부내 분열이 노정될 경우,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안정위주의 경제정책 추진

- 鄧小平이 주창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등소평이 향유하고 있는 카리스마가 결여된 江澤民 총서기가 鄧死後 제2의 「南巡講話」를 제창,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江澤民 역시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자신의 권력기반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정희구 세력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임.
- 이로써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이 하향조정된 95년도 경제성장률 8~9% 목표는 실현될 것이나, 물가상승률 15%억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1994년도 공업생산증가율이 18%인 반면, 농업생산율은 3.5%에 그쳐 농업과 공업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 全人大 제3차회의에서 농업예산을 전년대비 13.7% 증가한 447억元(약 53억2천만달러)로 편성하고 있으나, 농민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안정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國有企業의 합리화를 심도있게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임.
 - 1970년대 말 국유기업이 산업총생산량의 80%를 점하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48% 점유율로 하락하고 있으나, 약 1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약 1억1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이는 도시 근로자의 3/4에 해당하는 것이며 약 3억4천만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실정임.⁸⁾

- 따라서 國有企業의 경영합리화는 기업파산 또는 대량 실직상태를 초래하여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등소평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석유, 석탄,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2,000여개 국유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쇄 또는 합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3. 군부의 위상 강화

- 금번 全人大는 江澤民, 李鵬, 喬石 중 어느 지도자도 중국인민들로 부터 등소평이 받은 것과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 주었고, 특히 등소평과 같이 現 지도층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鄧사후 現 지도층간의 권력승계를 위한 투쟁에서 군부는 최

8) "The End Is Re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 2. 23, p. 49.

- 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天安門事態 이후 軍은 국방력 강화에만 진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軍內에 팽배하고 있으나, 군부의 지원없이 권력승계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군의 위상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최근 국방예산의 지속적 증대는 현 지도층의 군부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됨.

IV.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 중국은 작년에 이어 금번 全人大에서도 동북아 안보전략이 反霸權主義와 平和共存五原則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을 표방하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유지가 최우선 정책목표임을 지적하고 있음.
- 이붕 총리는 3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종전에 북한을 시작으로 각국과의 쌍무관계를 언급하던 전례를 무시하고,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던 대목을 모두 삭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對北 重視정책의 약화 내지는 남

북한 등거리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은 鄧死後에도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한 안보환경의 안정유지가 필요함. 따라서 중국은 事案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단순한 선린관계로 발전시키려 할 것임.

1. 북한의 안정문제

- 중국은 북한의 안정여부, 한반도 전쟁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장 노력 등이 동북아 및 중국의 안보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하여 왔음.⁹⁾ 그리고 소련 붕괴이후 중국은 남북한 양국에 대해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중국은 핵문제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기치 못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정치안정 확보가 가장 시

9) David M. Lampton, "China and the Strategic Quadrangle: Foreign Policy Continuity in an Age of Discontinuity," in *The Strategic Quadrangle*, edited by Michael Mandelbaum, 1995, pp. 75-76.

급한 것으로 판단, 김정일체제를 주변 강국 중 가장 먼저 지지 하였음.

- 이는 중국이 김정일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북한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임.
- 중국의 김정일체제 지지는 양국간 정치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중·북간의 선린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대북한 경협관계와 관련,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 수입가격 상승, 북한의 대중국 채무증가로 1994년도 중·북 무역이 전년대비 20~23%이상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추세는 3차회의 이후에도 중국의 東北三省(吉林, 遼寧, 黑龍江省)의 재정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와 지역정부의 실리추구 경향으로 중국의 대북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蘇聯 崩壞以後 중국은 북한에게 무역대금의 경화결제 요구, 原油수출시 우호가격제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의 硬貨決濟 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북한의 석유도입액의 30%정도만 경화결제를 실시하고 곡물류 부문에 대해서는 경화결제를 유보하는 등 경제지원을 하여왔음.

○ 그러나 향후 중·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전환

문제 등에서 異見을 노출하여 긴장된 측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대한국 경협관계는 중·북 경협관계의 악화와는 달리 크게 확대되었음.

- 1995년 3월 한국개발은행(Korea Development Bank)은 처음으로 중국국가개발은행(State Development Bank of China)에 5천만달러를 대여하기로 결정하는 등¹⁰⁾ 양국간 경협관계는 더욱 증대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대한국 경협관계는 더욱 증대될 것이나, 중국이 수요에 따라 투자를 선별하는 인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신소재, 첨단전자부품, 민간항공기, 이동형통신기기, 농약비료 등의 수입을 장려하고,
-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시계 등의 조립산업과 경기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개발¹¹⁾과 의약품 등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10) *Korea Herald*, 1995. 3. 18.

11) "China Punishes 11 Bankers for Violating Rul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5. 3. 22.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 북한은 停戰協定の 서명당사자를 유엔군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여 왔음.
- 북한은 군사정전위를 대신하는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를 개설(1994.5.24)하고 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를 요구, 중국은 이를 수용, 철수를 단행(1994.9.1)하였음.
 -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정전 상태의 지속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를 영구히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여 왔으며,
 -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정전협정의 지속여부와는 관계없이 희박하고, 미·북한 핵협상 타결이후,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¹²⁾
- 그러나, 중국은 평화조약체결 당사자문제에 대해 북한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북한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이 평화조약 당사자임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우려, 중국과 한국이 조약체결에 적당한 역할 수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12) "Positive Changes on Korean Peninsula Review," *FBIS-CHI-95-008*, 1995. 1. 12, p. 13~14.

3. 북한 핵문제

- 북한 핵과 한반도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관련 당사국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음.
 - 중국은 미·북한 제네바협상 타결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점차 완화되고, 미국의 대북한 무역제재 동결과 대북한 重油 搬出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북 관계개선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¹³⁾

- 중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하여 제네바 북·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喬石 중국 全人大 상무위원장은 한국 국회대표단과의 회담(1995.4.7)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함.
 -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어,¹⁴⁾ 한국형 원자로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대는 중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13) Jim Mann and Art Pine, "U.S. First Port Call to China Since '89 Crackdow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5. 2. 25.

14) 1995년 3월 중국은 한국이 중국연안에 각 1백만 킬로와트의 경수로 핵발전소 4기 개설 및 한국과 공동으로 수출용 핵발전소 설계와 제조협력을 확정한 바 있음. 중국이 수입할 핵발전소의 표준기술은 미국이 제공하여 건설한 한국의 울산 3호와 울산 4호 발전소 모형임. *Korea Herald*, 1995. 3. 14.

- 그러나,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한국, 미국과 북한 등이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반대할 것임.

V. 韓國의 考慮事項

1. 대중국 차원

- 중국은 전통적으로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추구라는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등 주요 문제에 대해 事案別로 북한에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치·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한국은 과대한 기대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있는 對中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은 대중 정치·경제분야의 점진적인 협력확대로 중국의 대외 협력 지향적인 인사들은 물론, 안정희구 세력과의 교분을 돈독히 함으로써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 鄧死後 지방분권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동북3성의 정치·군사·경제관련 지도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 특히 親北 보수성향의 당·정·군 인사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중국이 수요에 따라 외국의 대중 투자를 선별하는 인가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정부는 한국기업들의 대중 투자분야와 지역편중 현상을 개선하여 기업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억제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은 山東省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험, 중국시장의 內需지향을 겨냥한 경험, 첨단 과학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연계하는 가운데 동북3성에 대한 농·수산물, 천연자원 개발 투자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남북한 관계

- 남북간 주요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미합의의 성실한 이

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함.

-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가능성에 대비한 중국의 대미 견제 노력을 주시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다 세련된 對中 외교가 필요함.
-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 활용, 한국이 조약체결 당사자임을 중국측에 주지시키는 동시에 상호불가침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한·중간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중국측에 촉구하여야 할 것임.
- 중국의 東北三省 地域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 회사와의 합작으로 대북 경제진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의 지불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위탁가공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統一情勢分析 95-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6-9231,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3月 日
發行日 1995年 3月 日
